보도 참고자료

※ ’15.1.26일 조간부터 보도 요망

2015년도 업무계획

–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및 소상공인 활력 회복 –

2015. 1. 23.

중소기업청

목 차

Ⅰ. 2014년도 주요 정책 및 평가 ····· 1

1. 2014년도 정책 추진경과 ····· 1

2. 2014년도 주요 추진실적 ····· 2

3. 주요 정책 성과와 반성 ····· 4

Ⅱ.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····· 6

Ⅲ.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····· 7

1. 선순환 벤처·창업 생태계 정착 ····· 8

2.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····· 18

3. 소상공인·전통시장 활력 회복 ····· 32

4. 현장 체감형 중소기업 행정 구현 ····· 38

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····· 41

Ⅰ. 2014년도 주요 정책 및 평가

1 2014년도 정책 추진경과

□ **활발한 벤처·창업**과 함께 기업 규모별 **성장사다리가 원활**하게 작동하는 **활력 넘치는 "역동적 기업생태계"**를 **구축**

○ 범정부차원의 **'국정과제'**와 **'경제혁신 3개년계획'**을 토대로, 기업생태계 관련 정책과제를 **차질없이 수행**

국정과제	경제혁신 3개년 계획
1.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	18. 중소·중견기업 경쟁력 강화
3. 창업·재도전 분위기 확산	19. '창업 → 중소기업' 경영애로 해소
4.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	20. '중소 → 중견기업' 경영애로 해소
5. 중소·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	21. 창업·재도전 분위기 확산
35.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	22.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
	34.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

(대통령님 말씀) 벤처·창업기업이 중소·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,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 ('14.2.25)

□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**총 13차례의 대책**을 수립·추진하여, **도전적 창업과 글로벌 성장**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구현의 **기틀 마련**

	대책 명
벤처창업	·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('14.3)
	·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('14.3)
	· M&A 활성화 방안 ('14.3)
소상공인	·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('14.9)
	·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('14.10)
정책	· 정책정보 전달체계 개선방안 ('14.5)

	대책 명
성장사다리	· 중소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방안 ('14.3)
	· 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('14.7)
	·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('14.8)
	· 명문(名門) 장수기업 육성방안 ('14.9)
	·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('14.10)
	·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('14.11)
	· R&D 인력수급 애로 완화대책 ('14.12)

2 2014년도 주요 추진실적

1 벤처·창업 생태계

○ **(창 업)** '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*' 및 '창업인턴제**' 도입 등 **창업원별 차별화**된 **기술창업 플랫폼을 확충**

* 창업팀 67개 선정, 엔젤투자 151억원, 창업자금·R&D 270억원 지원

** 우수청년 인재 54명을 선발하여, 현재 50명이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 근무 중

【국정과제 1-2, 경제혁신 19】

○ **(투 자) 전문엔젤제도 도입*** ('14.7) 및 **엔젤소득공제 확대** (30% → 최대 50%), **분야별 벤처펀드 조성****을 통해 **안정된 투자재원 확충**

* 이택경 (Daum 공동 창업자), 류중희 (올라웍스 창업) 등 전문엔젤 11명 지정 ('14.9)

** 글로벌진출지원펀드 4,500억원, 청년창업펀드 1,500억원, 여성펀드 100억원 등

【국정 1-2, 경제혁신 22】

○ **(재도전) 연대보증면제** 제도를 **18개 민간은행으로 확산**하고, **재도전 전용 투자펀드** 신규 조성 ('14. 300억원) 등 **재도전 지원기반 확충**

【국정 3-3, 경제혁신 21】

2 성장사다리 구축

○ **(수출·판로)** 중국 (시안)에 中企 지원센터 개소 ('14.4), 베트남 (하노이)에 수출 BI 설치 ('14.4) 등을 통해, **정상외교 성과 극대화** 도모

- 중소기업 **창조혁신제품의 수요견인**을 위한 **종합대책** 마련 ('14.11), **공공구매제도 개선***을 통해 중소기업 **참여기회 확대**

*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시행, 공공기관 입찰절차 중지제도 도입 등

【국정 4-4】

○ **(R&D·인력)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*** ('14.8) 및 **R&D인력 대책** 마련 ('14.12) 등 **우수 인재의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** 여건 강화

* 12.29일 기준 2,240명이 가입하여 금년목표 1,600명 조기 달성

【국정 4-2, 경제혁신 19】

○ **(중견기업)** 중견기업법 제정·시행 ('14.7), **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방안** ('14.10) 수립 등 **중견기업 육성 정책기반 강화**

【국정 4-⑤, 경제혁신 34】

③ 소상공인·전통시장

○ **(지원체계)** **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** ('14.1) 및 **기금** 마련 ('15. 2조원), **'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대책'** 수립 ('14.9) 등 **지원체계 강화**

【국정과제 35-①】

○ **(소상공인)** 점포 이력·평가서비스* 제공 등을 통해 **준비된 창업을 유도**하고, **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** 등 **안정된 성장** 촉진

* 창업하려는 점포의 개·폐업 등 이력, 창업 시 예상 매출액 등의 정보 제공

【국정과제 35-①】

○ **(전통시장)** **전통시장 특성화 및 전통시장과 ICT·문화 접목 등**을 통해 **전통시장**으로의 **고객유인 강화**

* 문화관광형 시장 (누적) : ('13) 71개 → ('14) 94개 **【국정과제 35-③】**

④ 정책 활용도·체감도

○ 중소기업 지원이력을 관리·제공하는 **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**의 이력관리대상을 **전 부처 및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***

* 이력관리 대상사업 : ('13) 중앙부처 104개 → ('14) 중앙부처 156개, 지자체 401개

【국정과제 4-⑥, 경제혁신 18】

○ **정책정보제공 시스템** (www.1357.go.kr) **서비스**를 **고도화***하고, 중소기업 정책 100개를 엄선한 **포켓북 제작·배포** ('14.7, 10만부)

【VIP자시】

◇ **중소기업 정책기반 확충을 통해 성과가 점차 가시화**되고 있으나,

◇ 인력·기술·판로 등 **중소기업의 경영애로는 지속**되고 있으며, 소상공인·전통시장 등 **서민 체감경기는 회복은 지연**

3 주요 정책 성과와 반성

□ (성과) 벤처·창업 열기 속에 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세 시현

○ **벤처·창업** :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**신설법인 8만개, 벤처기업 3만개 돌파** ('15.1), **벤처투자** 실적도 **'01년 이후 최대치** 기록

신설법인·벤처기업 수 (만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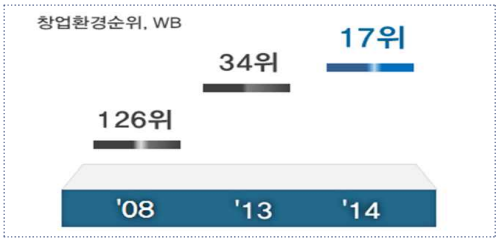


벤처 펀드 결성·투자



- 특히, 세계은행이 발표 ('14.10)한 기업환경평가에서 **창업부문 순위**가 **역대 최고 수준***을 기록

* 전체 189개국 중 17위 (World Bank)



외국 언론의 호평

- "융성하는 한국의 창업 물결에 정부의 지원이 한 몫" - 월스트리트저널 ('14.10) -
- "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들, 창조경제 격찬" - 파이낸셜타임즈 ('14.10) -



○ **성장사다리** : 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**성장 기반이 확충**되었고, 벤처천억클럽 등 **중견기업群도 증가 추세**

기업부설연구소 (만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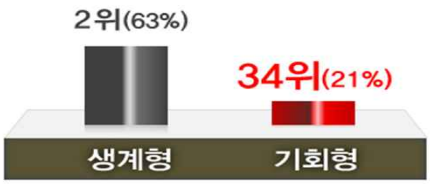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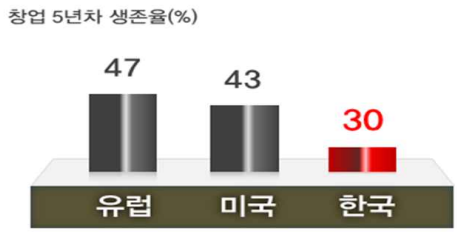


중견기업群



□ (반성) 창업기업 생존체력 및 중소·중견기업 성장 핵심역량 미흡

○ **벤처·창업** : 고조된 창업 붐에도 불구하고, **기회형** (Opportunity) **창업 비중** 및 **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저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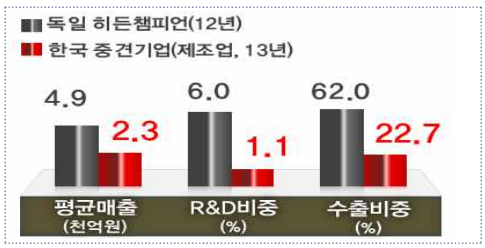
유형별 창업 순위 ('14, OECD)	국가별 창업기업 생존율
	

○ **성장사다리** : 중소기업 **연구기술 인력부족 현상**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, R&D 성공률 대비 **사업화 성공률도 절반 수준**

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(%)	中企 R&D 성공률 vs 사업화율 (%)
	

- **중견기업群**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, 獨 히든챔피언 기업과 비교한 **글로벌 핵심역량**은 **미흡**

  * 히든챔피언 수 : 獨 1,307개 ≫ 韓 63개



현장의 목소리

- "정부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고, 준비할 서류도 복잡하다" - 국가기술자문회의 ('14.10) -
- "석·박사 인력이 안와서 고졸이나 대졸을 채용해서 길렀더니 쓸만하면 가버린다." - 중소기업 간담회 ('14.10) -
- "막상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갑자기 지원이 줄어들어, 혁신할 여력이 부족하다" - 히든챔피언 간담회 ('14.9) -

Ⅱ.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

◇ 지난 2년간 추진한 **성장사다리 구축** 및 **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노력들을 토대**로,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**성과 창출에 주력**

기 본 방 향

1 창조경제 구현의 요체인 「선순환 벤처·창업 생태계 정착」

○ **고급 기술인력**의 **창업 도전**을 활성화하고, **창업기업 생존율 제고**를 위해 **창업도약기**(업력3~7년) **종합 지원체계** 마련

○ 벤처·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**투자·회수시스템을 중점 보강**하고, **성실실패시 신속한 재도전 지원** 프로그램 확충

2 「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」을 통해, 선진경제 달성

○ **중소·중견기업**이 창조적 기술·제품으로 **글로벌 경제영토를 확보**할 수 있도록, **'중소기업 성장판'을 확장**

○ 「중소→중견→글로벌 전문기업」으로의 **원활한 성장을 촉진**하고, 대·중소기업간 **상생협력 모델 확산·정착**에 주력

3 「소상공인·전통시장 활력 회복」으로, 서민 체감경기 개선

○ 소상공인·자영업자 **생애주기별 구조적 애로 해소**에 역점을 두는 한편, **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** 본격 육성

4 중소·중견기업 현장 중심의 「정책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」

○ 중소기업 지원시책·기관에 대한 **성과평가를 실시하고**, 정책정보 전달체계를 **중소기업 눈높이**에서 지속 혁신

Ⅲ.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

비 전	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
미 션	창조적 혁신경제, 원활한 성장사다리, 활기찬 소상공인, 손쉬운 中企 정책

추진전략	주요 실천과제
1. 선순환 벤처·창업 생태계 정착	❶ 기술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❷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 ❸ 원활한 재도전·재창업 환경 조성
2.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	❶ 중소·벤처기업 제품 신수요 창출 ❷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❸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 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글로벌화 ❺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강화
3. 소상공인·전통시장 활력 회복	❶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생업안전망 확충 ❷ 혁신역량 제고 및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❸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
4. 현장 체감형 중소기업 행정 구현	❶ 정책 효율성 및 고객 접근성 제고 ❷ 중소기업 현장규제 지속 개선

1. 선순환 벤처·창업 생태계 정착

◇ **"선순환 벤처·창업 생태계 조성"**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**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요체**로서,

○ 한국 경제에 **'젊은 피'를 수혈**하여 **활력을 높이고**, '고용정체 성장' 시대에 **일자리 창출의 버팀목**으로 기능

◇ **「벤처·창업 선순환 방안」**('13.5) 및 **후속 보완대책*** 등을 통해, 과거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들은 **상당부분 보완**

*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('13.10),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방안('14.3)

◇ 향후, 그간의 정책과제가 벤처·창업 시장에서 **스스로 작동하도록 정착**시키는 한편, **성과미흡 영역 개선**에 **집중**

1 기술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

◇ **고급 기술인력** 등이 창업시장으로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도록 **창업성공률을 제고**하고, **창업인프라 및 환경**도 지속 개선

❶ 기술창업자 발굴·양성 가속화

1 창업자 특성별 맞춤형 기술창업 촉진 ⇨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

○ 청년·대학생, 교수·연구원, 기술퇴직자 등 **창업자의 특성을 고려**한 **'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*'** 확충

* 창업선도대학, 청년창업사관학교,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등

-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, 시제품 제작, 시장 테스트 등 **사업화 과정** 및 **회사설립 절차**를 **밀착 지원**(창업자당 최대 1억원 이내)

'15년 기술창업자 발굴·양성 계획

플 랫 폼	선도대학	사관학교	대기업·벤처	기타 전문기관	계
지원규모	900명	500명	250명	3,350명	5,000명

○ 대학發 청년창업 수요 증가*에 대응하여, **창업선도대학 (21→28개) 및 사관학교式 선도대학 (10→14개) 지원 확대**

* 대학 창업동아리 : ('13) 1,833개 → ('14) 2,949개 (60.9%↑)

- 청년인재의 준비된 창업을 위해 **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 활동**을 지원하는 **'창업 인턴제 프로그램' 본격 운영** ('14. 시범, '15. 50억원)

* 벤처기업 매칭 ('14. 50명) → 벤처근무 (기본 1년 + 1년 연장) → 창업 (최대 1억원 지원)

○ **글로벌 창업 진출국가**를 대폭 **확대 ('14. 5 → '15. 10개국)**하고, **범부처 사업 연계**를 통한 유망 창업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(미래부 협업)

2 Start-up Valley 구축 ⇨ 벤처·창업 3대 클러스터로 육성

○ 서울 강남 (역삼동) 일대에 **「(가칭)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」** 신규 설치 ('15.6)



→ 구로 (IT벤처), 판교 (글로벌 벤처)와 함께 **벤처·창업 3大 클러스터**로 육성

- **대규모 창업보육 공간 (약 10,000m²)**에 창업팀 및 엔젤투자사 등이 **공동 입주***하여, 창업자-투자자간 **화학적 결합**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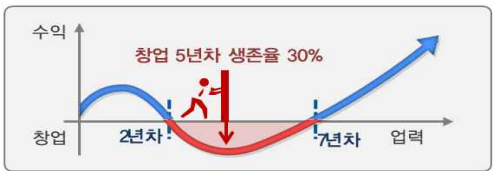
* '17년까지 160개팀 입주 예정 → R&D·민간투자 등 최대 3년간 10억원 지원

○ 민간 주도 창업 액셀러레이터* 및 벤처·창업 지원기관과 **국내·외 민관협력 네트워크**를 구축 (→ 실리콘밸리式 창업문화 창출)

* 마루180 (아산나눔재단), 디캠프 (은행권청년창업재단), 구글 캠퍼스 (예정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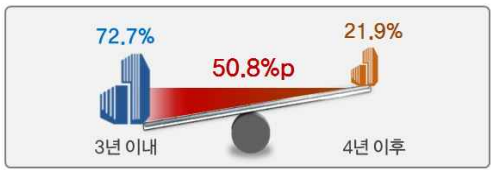
❷ 창업도약기 (업력 3~7년) 성공률 제고

◇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후 **사업화**하는 과정 (창업 3~4년차)에서 **자금조달 등의 어려움**에 직면 (→ 죽음의 계곡*)



* Death Valley : 창업 초기 사업화 및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현상

◇ **정부 지원**도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편중되어, **업력 4~7년 기업**에 대한 **사각지대**가 발생



*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,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('11~'12) 분석 결과

① **(R&D)** 창업 준비단계에서 구현한 **초기제품**을 **시장수요에 맞게 고도화**하도록, **창업기업 R&D투자 확대** ('14. 1,400 → '15. 1,600억원)

* 창업 7년 이내 기업대상으로,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(약 1,000개 업체)

② **(사업화)** 「디자인·금형 개선 → 해외현지화 R&D → 양산자금」을 일괄 지원하는 **「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」** 신설 ('15. 1,100억원)

* 「창업지원기업 성과·이력관리시스템」 구축 ('15.6) →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D/B화하고, 창업성과 및 애로, 생존 여부 등 체계적 관리

③ **(융 자) 총 1.4조원***의 정책자금을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**시설·운전자금** 등에 **저리 (3% 내외)로 공급**

* 창업기업지원자금 1.3조원 + 투·융자 복합금융 0.1조원

④ **(인프라)** 전국 대학·연구기관 등에 위치한 **282개 창업보육센터**를 통해, **안정적 사업공간 제공** 및 시험·연구장비 등 공동 활용

- 창업보육센터간 협력 유도를 위한 **「네트워크형 BI제도」 도입**을 통해, 투자·멘토링 등이 가능한 **액셀러레이터로 전환**

❸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환경 개선

1 기업가정신 확산 및 벤처·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

○ **청소년 비즈쿨** (Bizcool*) **확대** ('14. 200개 → '15. 300개), **자유학기제**** **운영** 등을 통해, 청소년 때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유도

* "Business + School"의 합성어로, 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배운다는 의미

** 중학교 대상 1개 학기 진로탐색, 동아리활동 등의 자율과정을 도입·운영

○ **성공벤처인 특강** (연 8만명), **청년 한마당투어** (연 15회) 등을 통해, 창업 성공 노하우 및 실패극복 사례 전수

2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⇨ 창업환경순위 글로벌 TOP10 (~'17)

○ **(절차 간소화)**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합하여, 창업넷 (startup.go.kr)을 **"창업지원 One-Gate"**로 고도화 ('15.6)



* 13개 창업지원사업 온라인 통합 신청·정산

- 재택창업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에 **합명·합자·유한회사**까지 **포함**하고, **창업절차** (3 → 2단계) 및 **기간** (4 → 3.5일)도 **단축**

- 사업별로 상이한 **신청서 및 사업계획서**를 **표준화**하고, 창업지원사업의 **불필요한 신청서류**를 **감축** (평균 8 → 5종)

○ **(교수·연구원 창업)** 휴·겸직 창업특례* 기관에 **정부출연·재투자기관 포함, 최초 휴직기간** (3+3 → 5+1년)도 **확대** ('15.4, 벤처기업법 개정)

* (현행) 국·공립 대학 교원 및 정부출연硏 연구원 등으로 한정

○ **(NICE형 창업지원)** 대학 기업가센터를 중심으로, **해당 대학의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**하고 멘토링 전담팀 운영 ('15. 5개 대학)

* Wisconsin 대학의 창업지원모델 (WARF)을 벤치마킹하여, 네트워킹 (N), 인큐베이팅 (I), 컨설팅 (C), 창업교육 (E)을 대학내 원루프 조직을 통해 지원

2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

◇ 조성된 **벤처펀드**의 **속도감 있는 투자**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, 성장단계별 **투자·회수시스템을 중점 보강**

❶ 벤처펀드 2조원 조성 및 신속투자 유도

□ 벤처펀드 **2조원*** **조성** 및 **1.8조원 투자** (전년대비 약 10% 증가)

* 모태펀드 주도 1.9조원 + 순수 민간 0.1조원

2015년 벤처펀드 조성계획

구 분	펀드 명	조성 계획 (억원)
창업초기 (3년 이내)	청년창업, 엔젤, 콘텐츠 초기기업 등	5,000
성장단계 (업력 3~7년)	유망 산업별, 해외진출, 글로벌 헬스케어	8,000
후기단계 (7년 초과)	고성장기업 등	6,000

□ 벤처펀드의 **과감하고 신속한 투자**를 위해, 운용사의 성과·관리 보수 인센티브를 투자 수익률 및 속도와 연계*

* 성과보수는 수익률 구간별로, 관리보수는 투자 속도별로 지급기준 상향조정

❷ 창업 초기단계 투자기반 확충

1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및 엔젤투자 활성화

○ **(창업펀드)** 1세대 선배벤처 및 대기업이 출자하여 **청년창업자에 투자**하는 **'청년창업펀드' 확충** ('14. 1,500억원 → '15. 1,000억원)

○ **(엔젤투자)** 엔젤투자자의 위험을 정부가 공유·분산해 주는 **'엔젤투자 매칭펀드'를 추가로 조성·운용** ('14. 1,720 → '15. 2,220억원)

- 엔젤투자 시장을 선도하는 **전문엔젤*** **발굴·육성을 강화** ('14. 11 → '15. 50명)하고, 투자기업에 대해 **R&D 자금을 매칭** 지원

* 전문엔젤 기준 : (투자실적) 1억원 이상, (경력) 창업 및 투자심사역 경력 보유자 등

- **개인투자조합** 등에 대해서도 모태펀드(엔젤계정) **매칭투자를 허용**하여, 엔젤투자 **참여 주체를 다변화**

* (현행) 개인투자자 위주 → (개선) 신기술창업전문회사·엑셀러레이터 등 추가

- 성공벤처인, 대기업 퇴직임원 및 지역재력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 **엔젤 투자자를 발굴**하고, 투자전문가 **교육과정 운영**

* 등록 엔젤(명) : ('14.10) 6,809 → ('15) 8,000 (전년대비 1,000명↑)

2 초기단계 투자 전문 「마이크로 VC제도」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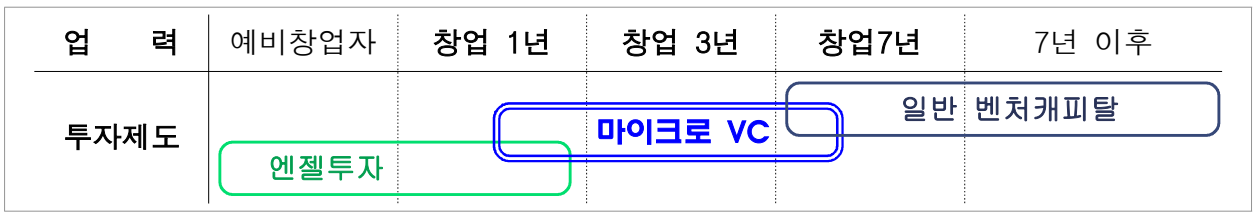
○ 시장 진입단계 창업기업 투자촉진*을 위해 일반 VC 대비 설립요건 등이 완화된 **'마이크로 VC**'를 제도화** (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)

* 최근 기존 벤처캐피탈(VC)들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, 성숙단계에 진입한 벤처·중소기업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(→ 창업 초기투자 위축)

** (예시) ① 유한회사형 : 투자 전문인력 규제 완화(금액 상한 조건부 2인 추가)
② 엔젤투자형 : 전문엔젤·엑셀러레이터·선도벤처 등 개인투자조합 조성 허용

○ 모태펀드 등 예산 일부 활용하여, **창업 3년 이내** 초기기업에 **60% 이상 투자를 의무화**한 **'마이크로 VC 전용 펀드'** 조성 ('15. 600억원)

성장단계별 투자제도 개관



❸ 기업수요 맞춤형 투자자금 공급

1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 및 협력 확대

○ 미국·중국·싱가폴 등 외국의 투자자금을 유치한 **'외국자본 공동투자펀드*' 확대 조성** ('14. 5,000 → '15. 6,000억원)

* '14년 추진실적 : 텐센트, 소프트뱅크 등의 자금을 유치하여 2,300억원 조성

○ **글로벌 벤처캐피털이 직접 운용하는 「한국형 요즈마 펀드」 조성 → 우리 기업에 51% 이상 투자** ('15. 2,000억원)

2 벤처투자펀드의 정책적 기능 강화

○ **(창조경제 구현)** '창조경제혁신센터'와 연계한 **「(가칭) 창조경제혁신펀드*」** 연쇄 조성 및 **'판교 창조경제밸리 펀드'** 신설 ('15. 200억원)

* 모태펀드-SKT와 공동으로 '대전·충남 창조경제혁신펀드' 300억원 조성 ('14.12)

○ **(시장기능 보완)** 투자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**'여성기업 및 지방기업 전용 투자펀드' 운용규모 확대**

* 여성기업 : ('14) 100 → ('15) 170억원 / 지방기업 : ('14) 200 → ('15) 400억원

3 고부가가치 창출 신산업 육성 촉진

○ **(펀드 조성)**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**'문화콘텐츠 펀드'** (문화부 협업), **'디지털콘텐츠 펀드'** (미래부 협업) **조성**

* '15년 출자예산 : (문화콘텐츠펀드) 600억원, (디지털콘텐츠펀드) 500억원

- **헬스케어펀드** (복지부 협업), **IP 사업화 펀드** (특허청 협업), **창조관광펀드** (문화부 협업) 등을 조성, **미래 유망 신산업**에 집중

* '15년 출자예산 : (헬스케어) 300억원, (IP사업화) 170억원, (창조관광, 신규) 130억원

○ **(규제 개선)**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('15.상)을 통해 **일부 금융업**에 대한 **투자 허용 → 핀테크(Fintech), 크라우드펀딩** 등 신산업 육성

❸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촉진

1 구주 인수(세컨더리) 펀드 확대

○ 벤처캐피탈 및 엔젤 등이 보유한 지분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**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** ('14. 6,700 → '15. 1조원)

○ 벤처펀드의 **구주 인수 참여를 적극 독려** (예 : 출자금의 10% 내외)

* 10% 구주 인수 시, 2천억원 수준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 효과

2 인수합병(M&A) 성공사례 창출

○ 대기업·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간 **만남의 기회를 제공**하여, **투자유치 및 M&A 활성화 지원** ('15. 2회)

○ M&A 시장에 대한 매수 재원 공급을 위해, **중소기업 M&A 지원펀드**를 **3,000억원 규모**로 신규 조성 (금융위 협업)

3 기업공개(IPO) 및 거래시장 제도 개선

○ **(코스닥) 스팩(SPAC*) 합병시 심사를 간소화**하고,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 완화 (금융위 협업)

*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: M&A를 유일한 목적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한 일종의 명목회사 (Paper company)

○ **(코넥스)**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**창업투자조합**의 **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** (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)

* (현행) 창업자·벤처기업이더라도 상장기업은 40% 의무투자 인정대상에서 제외

3 원활한 재도전·재창업 환경 조성

◇ **연대보증면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**하는 한편, 기업 부실화 위험을 **사전에 예방**하고 **성실실패 시 신속한 재창업**이 가능토록 지원

❶ 부실 사전예방 및 연대보증면제 확산

1 「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」 개편 ⇨ 부실예방 강화

○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「구조개선 건강관리」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 → **"경영개선 건강관리" 도입** ('15.2)

○ 사전적·예방적 기업경영 개선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권 추천 방식을 **정책금융기관** (중진공, 신·기보) **추천 방식으로 전환**

* 은행권과 진단기관(중진공, 신·기보)이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강도 높은 기업구조 개선 노력(자산매각, 품목·사업전환 등)을 전제로 정상화 지원

2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면제 확산

○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**연대보증 면제제도의 실효성 제고**

- **정책자금** : 기술사업성 우수기업(기업평가 4등급 이상)에 대해 **가산금리 없이 연대보증 면제 시행** ('15.1, 중진공)

- **보 증** : **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**을 '14.2월 이후 창업한 기업에서 **심사등급 우수 일반기업까지 확대** ('15.3, 신·기보)

3 회생가능기업 구조개선 전용자금 신설

○ 은행 워크아웃 추진기업,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을 위한 **「중소기업 구조개선 전용자금(융자)」 신설** ('15. 300억원)

* 지원대상 : 구조개선·경영개선 진단기업, 진로제시 컨설팅결과 '구조개선'기업, 은행 워크아웃 추진기업,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(10억원 한도)

❷ 재창업 성공 지원프로그램 확충

1 성실실패 기준 확립 및 「재창업 엑셀러레이팅」 신설

○ **(성실실패 기준)** 도덕성 평가를 대체하는 **"성실실패 가이드라인*"**을 마련, **정부지원 공통 기준**으로 활용토록 유도 ('15.6)

* (판단기준) 원칙 성실 → 예외적 불성실의 네거티브 방식 채택 (경제범죄 경력, 채무상환 노력, 폐업실패 사유, 고용문제, 자금유용 등 구체적 기준 명시)

○ **(엑셀러레이팅)** 성실실패 후 빠른 재기를 원하는 **우수 재기기업인**의 사업계획을 **비즈니스 모델(BM)화**하여 재창업 성공률 제고

- VC 등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**선발**부터 **비즈니스 모델 코칭, 사후관리**까지 全과정에 참여하여 **전담 멘토링 제공**

2 재도전자금 공급 확대 및 「재도전 지원센터」 고도화

○ **(자금 공급)** '14년 대비 **2배 확대**된 **1,000억원**의 **재도전 융자금***을 공급하고, **재도전 R&D자금도 증액**

* 융자 : ('14) 500 → ('15) 1,000억원 / R&D : ('14) 25 → ('15) 30억원

- 재창업자금의 일부 ('15. 200억원)를 **"상환금조정방식*"**으로 운용하되, 우수 재창업자 선정을 위해 **'공모형'**으로 운영

* 재창업자금 대출 후 성실실패 등으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

○ **(재도전센터)** **재도전·재창업 종합지원 플랫폼**으로 확대 개편

- 기존 재기기업인 상담기능 외에, 재기기업인에 대한 **실질적인 재창업 사업화 지원** 등 기능 강화 ('15.5)

* 창업보육(BI), 사업화 지원 및 재기기업인의 네트워크 공간 제공 등

2.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

◇ 우리 경제가 **확실한 선진국 대열**에 들기 위해서는, "中小기업 → 中堅기업 → 글로벌 전문기업"으로의 **성장사다리 구축이 필수**

◇ 그간 **중소기업 예산 지속 확대***, **중견기업법 제정**·시행('14.7) 등 재정적·**제도적 측면은 기본골격**을 마련

* 중기청 소관 예산(조원) : ('12) 6.2 → ('15) 7.9 (27.4% ↑)

◇ 향후, **중소·중견기업**이 창조적 기술·제품으로 **글로벌 경제영토를 활보**할 수 있도록, **'기업 성장판'을 확장**하는 한편,

○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**정당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**와 대·중소기업간 **자생적 상생협력 모델**의 **확산·정착**에 주력

1 중소·벤처기업 제품 신수요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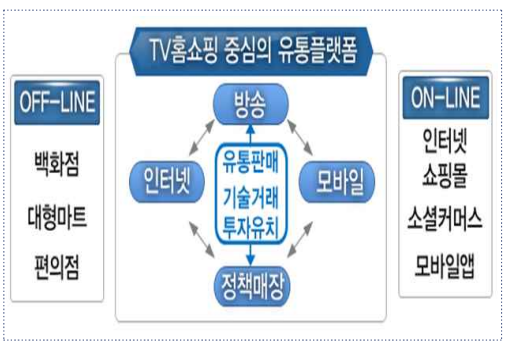
◇ 온·오프라인 **통합 유통플랫폼** 구축을 통해 창조적 혁신제품의 **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**, 공공조달시장 등 **판로 확대 병행**

❶ 창조혁신제품 시장진입 촉진

1 「창조제품 통합 유통플랫폼」 구축 ⇨ 시장진입 마중물 역할

○ **(통합 플랫폼)** 방송·인터넷·모바일·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**"통합 유통플랫폼" 개통** ('15.6)

- **창조경제혁신센터** 등에서 배출된 혁신제품을 **우선 연계**



○ **(방　송)** 벤처·창업, 중소기업의 창조혁신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**"공영 TV홈쇼핑"**을 **조속히 설립** ('15.6, 미래부 협업)

2 온·오프라인 유통채널 다변화

○ **(온라인)** 국내외 유통채널*들이 **창조혁신제품을 언제든지 발굴**할 수 있는 **「창조혁신제품 발굴·연계시스템」 구축** ('15.9)

* 백화점, 대형마트, TV홈쇼핑, 전문소매점, 인터넷 쇼핑몰, 도소매업자, 바이어 등

- 시장조사부터 전략수립, 판촉 및 유통망 입점까지 종합 지원하는 **'마케팅이노베이션' 프로그램 연계** ('15. 30억원, 500개 제품)

창조혁신제품 발굴·연계 시스템

신상품 등록		D/B 구축		신상품 검색
• 상품정보 실시간 등록 (B2C 제품 위주)	⇒	• 상품정보 검증 및 D/B 구축·서비스	⇒	• 상품정보 DB 실시간 검색
중소기업, 지원기관		유통센터		국내외 유통채널

○ **(오프라인)** 행복한백화점 (서울 목동) 등 **14개 정책매장*을 활용**하여 **"한국판 도큐핸즈" 개설·운영** ('15.9), **창조제품 1만개** 발굴·입점

* 명동·청주, 인천공항, 인천항, KTX 부산역, 고속도로휴게소 5개 등 14개

사 례

• 일본 도큐핸즈 ('76.8 설립) :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소매점으로, 생활제안형 혁신상품 15만개 취급 ('14년 842억엔 매출)



3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

○ **「홈쇼핑 정상화 TF*」를 구성·운영** ('15.1)하고,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조건에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 계획을 반영 ('15.6, 미래부 협업)

* (구성) 미래부, 공정위, 중기청 등, (기능) 비정상적 관행 근절방안 마련

○ **백화점 직매입 (반품불가) 유도**를 위한 **가이드라인 마련** ('15.하, 동반위)

* 백화점 직매입 비중 (%) : (국내백화점) 8.1, (미국 Macy's) 41.6, (영국 Debenhams) 67.0

❷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

1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 (조달청 협업)

○ **(구매 확대)**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TF**」를 구성하여 '**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방안**' **마련** ('15.6)

*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제한 규제 개선, 구매표준 매뉴얼 마련 등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 등을 분석하여 **기업 성장견인 효과가 높은 제품군**으로 **경쟁제품 재지정*** ('15.12)

* '15.12월, 중기간 경쟁제품(207개)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(123개) 지정기간 만료

○ **(가격 보장) 다수공급자계약(MAS*)** 2단계 경쟁에서, 중소기업자간 출혈경쟁 방지를 위해 **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(10%) 설정** ('15.1)

* Multiple Award Schedule :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,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

- **2.1억원 미만 물품**(중소기업 우선구매) 입찰방식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**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** ('15.6, 국가·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)

2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및 부적격 업체 퇴출

○ **(이행력 제고)** 거짓보고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 **공공기관장 또는 중소기업자**에 대한 **'과태료 부과기준'** 마련 ('15.6, 판로법시행령 개정)

-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항에 대한 **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**을 대상으로 **'감사원 감사청구 제도'** 신설 ('15.9, 판로지원법 개정)

○ **(조사·퇴출)**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(30,924개)에 대해 **전수조사**를 **실시** ('15.7~10)하여 **위장 중소기업 퇴출** 조치

- 위장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방지를 위해, **여성기업 범위 개편*** 및 **위장 여성기업 제재근거 마련** ('15.6, 여성기업법 개정)

* (현행)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 → (개선)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

2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

◇ **한·중 FTA 체결** 등으로 **세계 3위 경제영토**를 **확보**함에 따라, 창조적 혁신제품의 **해외진출 및 수요 창출**에 **지원역량 집중**

❶ 한·중 FTA 체결 ⇒ 중국 진출 입체적 지원

1 중국 현지 진출거점 및 유통망 확충

○ **(현지 진출거점)** 중국 **내륙지역** 중심으로 **수출인큐베이터***를 확대하고, 현지 **中企 지원센터 확충** ('14. 1 → '17. 7개소)

* ('14) 5 → ('15) 6 (충칭) → ('16) 7 (정저우) → ('17) 10개 (우한 등)



○ **(유통 네트워크)** 중국 내륙 주요 거점에 **'중소기업 전용매장'**을 **신설***하고, 2·3선 도시 **로컬유통기업과 협력네트워크**** 구축

* 중국 전용매장 (개) : ('14) 3 → ('15) 5 (선양, 충칭) → ('17) 7 (우한, 광저우)

** 대형유통망 : 쑤닝그룹과 온라인 한국관 개설 ('15.11)
로컬유통망 : 웨이하이 (생활용품), 윈덩 (소비재), 옌타이 (화장품·의류)

○ **(비관세장벽 극복)** 韓-中 **시험인증 기관간 MOU**를 통해 CFDA* 인증취득 **시간·비용 단축**, 지원한도 확대('14. 1,000 → '15. 3,000만원)

* CFDA (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: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

2 對중국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집중

○ **(중국 진출 펀드)** 중국 진출기업 투자 경험을 보유한 국내 VC와 모태펀드가 **5천억원*** **규모**의 **중국 진출 지원 펀드** 조성

* 중국진출 전용펀드 2,000억원, 팬아시아펀드 3,000억원

○ **(중국 전용 R&D)** 중국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혁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**'중국 진출 중소기업 R&D' 확대**

* 중국 R&D 지원규모 : ('14) 100억원 (시범운영) → ('15) 200억원

○ **(차이나 하이웨이)** 준비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, **중국 수출 유망 기업**을 발굴하여 **현지 진출 및 경영전략 수립 지원**

* 차이나 하이웨이 지원계획 : ('14) 60 → ('15) 100개사

○ **(법령정보·컨설팅)** 중국법령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범위를 **지방법령*까지 확대**하고, 현지로펌을 활용한 **1:1 법령컨설팅 지원사업 신설**

* ('14) 3,712개 (중앙법령) → ('15) 5,000개 이상 (중앙+지방법령)

❷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

1 온·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마케팅 지원 확대

○ **(온라인)** 온라인 쇼핑몰 판매채널*을 **확대**하고, 해외 소셜커머스(美 그루폰, 中 메이투안왕) 활용 **온라인 공동구매** 지원 ('15. 50개사)

* 아마존, 타오바오, 이베이, 라쿠텐, 큐텐 → 쑤닝, KMall, 11번가 등 추가

○ **(오프라인)** **해외 전시·판매장**의 유통채널별 **판매전문가** (전문셀러, 벤더 등)를 보강하여 **안테나숍 역할** 강화

2 중소기업 수출저변 확대 및 경쟁력 제고

○ 수출유망 내수기업 발굴 → 수출전문가 (PM) 매칭 → 수출지원사업 연계*를 통해, **수출기업으로 성장** 유도 ('15. 2,400개사, 산업부 협업)

* 해외진출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, 외국어 통·번역 등

○ 해외수요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, **R&D와 해외 마케팅을 연계 지원** ('15. 50개사)

3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

◇ 중소기업의 **인력수급을 원활**하게 하고, **기술혁신 역량제고** 및 **자금조달 여건 개선** 등을 균형감 있는 지원방안 강구

❶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

1 (숙련 · 기술인력)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

○ **'일 · 학습 병행제' 확산** ('14. 1,300 → '15. 3,000개, 고용부) 및 스위스式 **「한국형 직업학교」 신설** · 운영 ('15. 9개교, 교육부)

○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하는 **특성화고-전문대 통합과정** (기술사관) **운영을 확대** ('14. 17 → '15. 20개 사업단)

○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**취업맞춤반** ('14. 547 → '15. 580개) 및 **1팀-1프로젝트** ('14. 12 → '15. 20개교) **확대 운영**

2 (인력유입 촉진) 숙련·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

○ **국립공고생** :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급하는 **이노-마이스터 장학금 (1인당 500만원, 100명) 연장** (농협-이노비즈협회 협약)

○ **이공계 대학생** : **「기업 맞춤교육 → 中企 취업 → 석사 취득 → 병역혜택」**을 **패키지**로 지원하는 **프로그램 신설** ('15. 2개 대학, 60명)

○ **석 · 박사 인력** : **채용조건형 계약학과*를 확대** ('14. 1개 → '15. 10개 학과)하고, **박사학위 취득 지원** ** **계약학과 신설** ('15. 2개 학과)

*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석사 학위 등록금 100% 지원

**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석사 학위 소지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2년간 박사 학위 course work 등록금의 70% 지원

○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자신의 전공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는 **후진학 장려금제 도입** ('15. 500명)

* 2년간 근로자 부담 등록금의 50%까지 지원

3 (장기재직 유도) 중소기업 근무 및 장기재직 촉진

○ **성과보상기금*** : 홍보 강화, 연계사업** 추진 등을 통해, 중소기업 핵심인력 **성과보상기금 가입자 확대** ('14. 2,255명 → '15. 1만명 목표)

* 핵심인력 : 중소기업 (= 1 : 2이상) 공동적립, 5년간 재직시 보상금 지급 ('14.8 ~)

** (예시) 희망사다리장학금 (교육부) 수혜자 가입 시 재직장려금 추가 지급

○ **스톡옵션제도** : 옵션 행사시 **최저 행사가격 제한* 완화, 스톡옵션 공시** 완화** 등 규제 개선 (법무부 · 금융위 협업)

* (현행) '상증법상 시가'와 '액면가' 중 높은 금액 → (개선) '액면가' 이상 (벤처법 개정, '15.하)

** (현행) 스톡옵션 행사 결과 실명 공개 → (개선) 익명 허용 (기업공시 실무안내서 개정)

○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에 대한 **「근속장려금 제도*」 신설** (고용부)

* 신성장동력·뿌리업종, 근속 1년마다 100만원을 지급 (최대 3년)

○ **산업단지**의 주거 · 안전 · 복지 · 보육 환경을 **효과적으로 개선**하기 위해, **3개 부처 10개 사업 패키지 지원*** (고용부, 산업부, 국토부)

* 어린이집, 체력단련시설, 통근버스, 건강센터, 기숙사, 공공임대주택 등

4 (미스매치 완화) 우수기업 정보제공 등 전방위 인식개선

○ 강소기업 (고용부), 인재육성기업 (중기청) 정보 등을 **'워크넷'으로 통합**하고, **취업을 위해 적극 활용** (행자부, 고용부, 교육부 협업)

- 취업연계 기업설명회 등 **고용친화적 중소기업 발굴 · 홍보*** 강화

* 취업 연계 기업설명회,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중소·중견기업 출연비중 확대 등

○ **중 · 고 · 대학생** 대상의 중소기업 **바로알기 체험** 실시 ('15. 2,700명)

❷ 기술혁신 역량 제고

1 중소기업 R&D투자의 효율성 확보

○ 중소기업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, 국가의 **미래 성장동력 분야*와 연계된 선도형 R&D** 지원 ('15. 2,620억원)

*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(미래부), 387개 핵심기술테마 (산업부) 등

○ **정부 R&D**지원 예산 중, **중소·중견기업** 지원 비중을 **지속적으로 확대**하도록 노력 ('13. 16.9 → '15. 17.9%)



2 중소기업 R&D 사업화 성공률 제고 : ('13) 47.9 ➜ ('17) 60%

○ 기술개발에 성공한 **제품생산과 함께 판로 확보가 가능**하도록, **'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'** 및 **'민관공동 협력 R&D'** 확충

구 분	구매조건부 R&D	민관공동 협력 R&D
참여기관	('14) 100 → ('15) 110개	('14) 53 → ('15) 60개
지원규모	('14) 815 → ('15) 915억원	('14) 6,300→ ('15) 7,000억원

- **구매조건부 R&D프로그램**을 B2B 기업·공공기관 → **B2C분야로 확대** (홈쇼핑 등 유통분야 수요처도 구매기관으로 참여)

○ 중소·중견기업 R&D과정에서 **특허분석 전문기관 등**이 참여하여, **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(IP-R&D) 수립**·제공 ('15. 400개사, 특허청 협업)

3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 확충

○ 수도권에 **'지방 중소기업 전용 R&D센터'**를 신설 ('15.6, 2개소)하고, 입주기업과 대학·연구기관간 협력 유도

○ 대학의 **연구년 교수, 퇴직기술자 등을 활용**하여, 중소기업 **R&D 과제 참여** 및 **기술애로 해결** ('15. 35억원, 270개 과제)

❸ 정책금융 공급체계 효율화

1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(100조원) ⇨ 자금애로 완화

'15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

구 분	정책자금(융자)	보 증	매출채권보험
지원규모	('14) 3.82 → ('15) 4.53조원	('14) 76.0 → ('15) 78.4조원	('14) 14.0 → ('15) 15.5조원

○ **(융 자)** 시설자금 및 **신용대출 중심***으로 지원하고, **성장단계**에 따라 **맞춤형으로 운용** ('14. 3.82 → '15. 4.53조원)

* 시설자금 비중(%) : ('14) 44.1 → ('15) 60 / 신용대출 비중(%) : ('14) 78.6 → ('15) 80

- **고성장기업** 및 **기초 제조기업** 지원을 통해 **성장동력**을 **확충**하고, **재도약자금**을 **신설**하여 생애주기별 (Life-Cycle) 지원체계* 구축

* (창업기) 1.4 → (성장기) 1.32 → (재도약기) 0.2조원

○ **(보 증)** **유망 기술창업기업** 등에 대한 **지원**을 **확대**하고,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**금융안전망**을 **강화** ('14. 76.0 → '15. 78.4조원)

* 신 보 : ('14) 39.5 → '15. 40.0조원 / 기 보 : ('14) 18.7 → ('15) 19.5조원
지역신보 : ('14) 17.8 → '15. 18.9조원

○ **(매출채권보험)**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**거래기업 부도 등에 대비**한 매출채권보험 **인수규모 확대** ('14. 14.0 → '15. 15.5조원)

2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

○ **(정책자금)** **행정정보망과 연계** 확대('15.1), **세무증명 일괄전송 시스템 구축** ('15.3)을 통해 **서류제출 부담**을 대폭 **완화** ('14. 9 → '15. 2종)

○ **(지역신보)** 신용보증 **기한연장 신청시** 수요자 편의를 위해 기존 '영업점 방문 기한연장 방식'에서 '**무방문·무서류 방식**'으로 **개선**

*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→ 연간 12만건 무방문·무서류 처리

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글로벌화

◇ 지난해 제정·시행된 **중견기업법의 입법 취지**를 살려, 중장기 **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를 구체화**하고,

◇ **중견기업의 추가 성장** 및 **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견인**하기 위한, **'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'** 구축

❶ 중견기업 후보기업 발굴 및 육성

1 고용창출 역량이 큰 고성장 중소기업* 발굴·지원

* 기준 : 3년 평균 고용증가율 또는 매출증가율 20% 이상 기업

○ 고성장 기업에게 수출마케팅·정책자금·R&D 등을 **패키지로 지원**하여 신규고용 창출 및 **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**

○ '15~'17년까지 3년간 **총 1,500개 이상**의 고성장 기업 선정·지원

* 연도별 지원예산(억원) : ('15) 3,250 → ('16) 3,900 → ('17) 4,400

2 「지역형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」 전국 확대

○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기반 **유망 중소·중견기업**을 발굴하여,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집중 육성**

* 연구개발(R&D), 수출마케팅, 자금, 인력 유치, 경영컨설팅 등 종합지원

* ('14) 18억원, 4개 지자체 시범운영 → ('15) 100억원, 비수도권 14개 지자체

3 「명문(名門) 장수기업 확인제도」 도입 및 본격 시행

○ 확인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, 『**중소기업진흥법**』('15.2) 및 『**중견기업법**』 **개정**('15.6)을 조속히 마무리

○ **확인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**하고, 세부 운영요령 제정 등을 통해 **'15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**

❷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및 부담 완화

◇ **중소 → 중견기업**으로 성장할 경우, 급격한 지원 축소 및 규제 증가가 **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***로 작용 (→ 피터팬 증후군)

* ('13.1) 83개 (배제 63, 규제 20) → ('15.1) 74개 (배제 58, 규제 16)

1 「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」 수립

○ 중견기업법 및 시행령 제정·시행('14.7)에 따라, **중장기** (2015~19) **중견기업 성장 비전**에 기초한 **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**하고,

○ 중견기업 관련 **국내외 현황 및 정책동향**을 **체계적으로 분석**하여, **'중소 → 중견 → 대기업'**으로의 연차별 성장지원 계획 수립 ('15.3)

2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체계 단계적 정비

○ 중소기업 범위 인용법률 (56개) 등 **성장저해 우려 법령**을 종합 검토하여, **「중소 →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」 마련** ('15.5)

성장친화형 법령정비 로드맵 (안)

구 분	단 기		중장기
추진시기	2015 ~ 2016년	➡	2017 ~ 19년
정비법령 (총 34개)	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26개 법령 (法 16, 令 8, 規則 2)	➡	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8개 법령(法 5, 令 3)

- **중기청 소관** : R&D·인력·수출 등 **핵심정책 지원 대상**을 중소기업 → **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**하는 **특례** 마련 ('15.6, 중견기업법 개정)

- **타부처 소관** : 산업부 등 **타부처 소관 27개 법령** (法 15, 令 10, 規則 2)은 각 부처의 협조를 얻어 **개별 법령 단위로 단계적 개정**

○ **'대기업' 용어 사용 법령**(총 23개*)을 정밀 검토하여, **"대기업 ≒ 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"으로 명확화**하는 방안 마련('15.12)

* 정의 없음 11개, 중소기업 아님 9개, 중소·중견 아님 1개, 상호출자제한집단 2개

❸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

1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 및 집중 육성

○ 글로벌 핵심역량을 보유한 **후보기업**(~'17. 1,150개)을 **발굴**, **'한국형 히든챔피언'**으로 **집중 육성**('14. 63 → '17. 100개, 산업부 협업)

- **2단계 통합지원프로그램***(글로벌 도약 → 글로벌 성장 단계)을 통해, **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**

* 기존 4개 사업(지역형 강소, 글로벌 강소, 월드클래스300, 글로벌 전문) 일원화



○ 민관 합동의 **「(가칭) 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*」** 구성·운영('15.3)을 통해, **지원시책 연계** 및 **공동 지원 방안** 모색

* 히든챔피언 육성(輸銀), 코스닥 히든챔피언(거래소), Trade Champs club(무보) 등

2 「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」 내실화

○ 기존 **「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」**('11~'14년간 156개 업체)를 한국형 **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체계**로 고도화('15.3)

- **신청자격**에 수출역량 추가, **미래성장성**에 중점을 둔 **선정평가**, R&D 수행시 **'무빙타겟제' 도입** 등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

○ '17년까지 300개사 선정 목표 및 지원의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, **'15년에는 30개 내외 기업 선정**('15.5)

5 대 ·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강화

◇ **기업간 자율협약**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 및 대 · 중소 상생협력의 **실효성을 확보**하고, 불공정 행위 **제재 수단의 활용도** 제고

❶ 사업영역 보호 및 상생협력 촉진

1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

○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**적합업종 및 자율상생협약 품목**에 대한 **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*** 실시 (동반위)

* 정기조사 (5월, 11월, 전수조사), 수시조사 (동반위에 접수된 사항에 수시 조사)

○ **적합업종 권고기한** (3년)이 **도래**하여 **재합의 진행중인 제조업** 및 **신규신청 품목**에 대한 원만한 협의 유도 (동반위)

* 재합의 신청 77개 중 49개, 신규 신청 14개 품목은 협의 중 ('14.12 기준)

2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 확충

○ 대기업의 해외진출 및 성공 경험을 활용한 **현지화 기술개발*** 및 **국가별 스토리텔링**** **마케팅 지원**

* 후라이팬의 경우, 중국은 대형사이즈 및 내부가 깊게 패인 제품 선호

** 오리온 초코파이는 중국에서 하오리요우 (好麗友, 좋은 친구) 파이로 작명하여 성공

○ **CJ 등 대기업의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**하여 중기제품 해외마케팅 **지원 확대** ('14. 680 → '15. 900개사)

○ 유통업 분야의 상생협력 활동의 확대 유도를 위해 **유통업 분야 상생협의회*** **운영** 및 **수탁기업협의회 확대** ('14. 1 → '15. 5개)

* 협력재단 · 유통대기업 (15개사)간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 ('14.11.17) 후속조치

❷ 불공정행위 근절 및 기술보호 강화

1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

○ 의무고발요청 관련 **전담인력을 추가 확보*** ('15.5, 2명)**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 행위****에 대해 **고발을 강화**하도록 제도 운영

* 기존 전담인력 3명과 합쳐서 의무고발요청 전담 TF (5~6명) 운영

** 기술자료 유용, 부당 대금 결정, 부당 발주 취소, 부당 반품, 부당 대금 감액

○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**공공기관 입찰 제한요청기준을 강화*** (상생법 시행규칙 개정)하고, **입찰참가 제한 기간 연장**** (기재부 협업)

* 제한요청기준 : (현행) 위반점수 3년간 누산 10점 초과 → (개선) 5점 초과

** 중기청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고 있으나, 제한기간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개월이어서 처벌효과가 반감 (기재부 협의)

○ 징벌적 손해배상, 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 **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** 위해, **법률지원 서비스 확대***, **정부합동 법률지원 설명회** (6회) 개최

* 대·중소기업 협력재단에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를 채용 ('15.2, 2명) 하고, 공익법무관 활용 추진 (법무부 협의)

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확대 및 인식개선

○ 중장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**'중소기업 기술보호 3개년 종합계획'** 수립 ('15.6)

○ **기술유출 피해**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 (변호사, 변리사 등)로 구성된 **'中企 기술분쟁 조정·중재위원회'** 설치·운영 ('15.2)

○ **기술자료 임치** ('15. 7,000건), **기술보호 상담** ('15. 630건), **보안시스템 구축** ('15. 37개사) 지원 등을 통한 **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**

○ 기술가치 및 보호에 대한 **인식 제고**를 위해, **기술보호지침 보급·확산**, 기술보호 교육, 기술보호 홍보 로드쇼 등 추진

3. 소상공인 · 전통시장 활력 회복

◇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은 **"민생경제의 근간*"**으로서, **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**를 위한 **최우선 정책고객**

* 전체 취업자의 21.9% (568만명, '14.11),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시 26.5% (689만명)

◇ 그간 조직 · 법률 · 예산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**완비된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***의 토대를 구축

* 소상공인진흥공단 ('14.1), 소공인특별법 ('14.5), 소상공인진흥기금 ('15. 2조원) 등

◇ 향후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**생애주기별 구조적 애로 해소**에 주력하는 한편, 개성과 특색 있는 **전통시장 집중 육성**

1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생업 안전망 확충

◇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**과잉 창업**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**창업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**하고, 실패에 따른 **위험부담 분산** 지원

❶ 과잉진입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

1 상권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

○ 창업을 준비하는 **중장년층 등**에 대해 창업 전 성공 · 실패 가능성 판단이 용이하도록 **창업과밀지수*와 과잉진입 경고등** 표시 ('15.1~)

* 소비수준, 유동인구,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에 예상되는 매출전망 등을 종합지수화 하여 A (안전), B (주의), C (위험), D (고위험) 등급으로 표시

○ 창업하려는 점포의 **개 · 폐업 이력** 및 **예상 매출액 등을 분석 · 제공**하는 **'점포 이력 · 평가서비스' 전국 확대***

* (기존) 서울 지역 음식점 → (확대) 전국 음식점 및 소매점

2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중심 창업교육

○ 틈새시장 공략 등을 위한 **신사업 아이디어 사업화*** **지원 확대**

* 사업화 소요비용의 50% 이내 지원(최대 25백만원) / ('14) 15건 → ('15) 60건

○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, **수준별·대상별 창업교육*** **프로그램** 운영

* 지원규모 : ('14) 4,000명 → ('15) 4,500명

구 분	지원내용	주 관	규 모
예비창업자	• 면접·적성검사를 거쳐 소수정예 선발 • 교육(150시간), 점포체험(3개월), 정책자금 연계	소상공인 사관학교	300명
특화형·비생계형	• 성공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실습 지원 • 자금 연계(최대 7천만원 한도, 금리 3.36%)	창업학교 (민간기관)	4,000명
해외창업 희망자	• 국내시장보다 경쟁이 덜한 신흥개도국 진출 지원 • 국내교육(60시간) 및 해외교육(100시간) 제공	창업학교 (민간기관)	200명

❷ 재기 지원 및 생업 안전망 확충

○ 생계형 업종에서 **유망 업종으로 전환**하려는 소상공인에게 **「교육-멘토링-정책자금」**을 연계지원 ('15. 1천명)

○ 부처간 협업을 통해 **컨설팅, 취업훈련 및 장려금** 등을 지원하는 **'희망리턴 패키지' 도입** ('15. 1만명)

1단계 (중기청)	2단계 (고용부)	3단계
사업정리 컨설팅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	취업상담, 직무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	전환대출 융자(중기청) 취업성공수당(고용부)

○ 소상공인의 고령화(만 60세 이상) 또는 폐업 시 지급하는 **'소상공인 공제' 조성규모 확대** ('14. 2.6 → '15. 3.5조원)

2 혁신역량 제고 및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

◇ **경쟁력 있는 소공인**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**핵심 역량을 강화**하고, 자영업자 **경영지원 프로그램**을 **성과중심으로 재편**

❶ 소상공인 혁신역량 제고

1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집적화 및 지원체계 확충

○ 소공인 창조·혁신 지원의 거점이 되는 문래동式 **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·운영**

* 설치계획 : ('14) 8 → ('15) 25개



사 례

• **문래동 철공소 골목** :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 개소('14.11)하여 문화예술 접목, 대기업 협업을 통한 **'문래동식 창조경제 모델'** 제시



- 앱(App) 기반 **「온라인 소공인 제품 수·발주 시스템」** 개발('15.12) 및 집적지 내에 공동판매장 등이 결합된 **복합시설 구축**('15. 5개소)

○ **『도시형소공인법 특별법 시행령』**을 **제정**('15.5)하고, **「소공인 종합지원 5개년계획」 수립**('15.12)을 통해 **중장기 정책방향** 마련

2 민간주도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

○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**상권을 개발·관리**하여 **자생력을 확보**할 수 있도록 **「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*」**제정('15.하)

* 상권운영조합 설립, 자율상권구역 지정·신청, 구역 내 규제 특례 등

○ **'규모의 한계' 극복**을 위해 **소상공인 협동조합** 설립을 유도하고, **공동사업 지원** 확대 ('14. 400 → '15. 528개)

-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**'청년 상인협동조합' 설립** 촉진('15. 80개)

사 례	• 완도매생이조합 : 청년상인 6명이 설립, 정부 공동장비 지원을 받아, 조합설립 前 대비 매출액 4.5배 증가 및 18명의 고용 창출 

❷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

1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및 교육·컨설팅 지원

○ **정책자금 지원규모**를 **대폭 확대** ('14. 9,150 → '15. 1조 4,970억원)하고, 창업 - 성장 - 사업전환 등 **생애주기별 세부자금 운용**

주 기	세부 자금	소 계
창 업	• 소상공인창업자금 (2,270)	2,270억원
성 장	• 일반경영안정자금 (3,500) • 긴급영업안정자금 (300) • 소공인특화자금 (3,500) • 전환대출자금 (5,000)	1조 2,300억원
폐업/전환	• 사업전환자금 (200) • 임차보증금안심금융 (200)	400억원

○ 업종별·지역별 **맞춤형 특화교육** ('15. 1.8만명) 및 상품개발, 마케팅, 고객관리 등 **분야별 전문가 컨설팅** ('15. 3,700건) 실시

2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

○ **(물류센터)** 중기 유통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**전면적 사업개편**을 추진하고, 사업개편 전까지 **신규건립 지원 잠정 중단**

○ **(나들가게)** 상품공급사를 **확대·선정**하여 **경쟁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**를 유도하고, **점주 선택형 컨설팅 지원** 확대 ('14. 1.5 → '15. 3천개)

○ **(정보 앱)**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앱 (4개*)을 **'표준 앱'으로 통합** ('15.3)

* 소상공인 지원 알리미, 소상공인 방송 yes-tv, 상권정보 앱,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

3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

◇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, **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·브랜드화**하고, **ICT 접목 등**을 통해 **고객편의 제고**

❶ 전통시장별 특성화 개발

1 시장별 특성화 지원 및 전통시장과 청년 활기 결합

○ 전통시장을 **3대 유형**(① 골목, ② 문화관광, ③ 글로벌 명품)으로 차별화하고, **'17년까지 375개** 특성화 시장 육성

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계획

시장 유형	특성화 내용	육성계획		'15년 예산
		'15	'17	
골목형	• 마케팅·상품진열·요리전문가를 투입하여 "1시장 1특색"을 개발하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	70개	200개	210억원
문화관광형	• 예술공방·도서관 등 시장에 작은 문화공간을 설치하고, 지역 예술인·주변 관광지 등 연계	87개	165개	249억원
글로벌명품	• K-pop 이벤터, 명품거리 조성 등 한류와 연계한 명품시장 육성	5개	10개	50억원

○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"**청년상인 인큐베이터**"를 설치하고, 창업교육, 경영컨설팅 및 영업공간자금 등 지원('15. 51억원, 100명)

사 례

• **전주 남부시장 '청년몰'** : 청년창업과 문화마케팅을 결합한 복합문화 쇼핑몰(청년점포 24개 입점) → 입소문과 청년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활기 회복



2 대기업·대학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한 특성화 지원

○ 정부·지자체와 해당 지역 대기업이 **공동자금을 조성**하여, 지속 가능한 **자랑거리** (대표상품, 서비스디자인 등) **개발** 지원

* 특성화 시장 선정 전후 지자체, 대기업과의 협업계획 제출시 세부사업 지원에 반영

- (사례) 강원도 봉평시장 : 강원도, 현대카드·현대캐피탈과 공동으로 재원 조성

○ **대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**를 활용한 경영혁신 촉진 ('15. 20개 시장-대학) 및 **예능계 학생의 재능기부** (100개 대학)를 통한 **특성화 지원**

❷ 고객편의 제고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

1 고객 편의시설·주차장 확충 및 ICT 접목

○ 노후시설 개선, 아케이드 설치 등 **편의시설 확충** (303개 시장) 및 주차장 설치, 주차장 이용 지원 등 **주차환경 개선** (145개 시장)

○ 상품·고객관리에 **태블릿 PC 활용, Wi-Fi 구역 설치, 모바일·온라인 상인교육, ICT카페** 등 전통시장에 **ICT 접목을 강화** ('15. 130개 시장)

-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, 「시장상품 검색 → 주문 → 배송 → 카드 결제」가 가능한 **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** ('15. 100개)

2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및 부정유통 방지

○ **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**을 위해, 기업 및 정부의 구매 확대 유도, 개인 구매시 할인율 (5%) 유지 등 추진

*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 : ('14) 3,600 → ('15) 4,000억원

- 중소기업 지원사업 (R&D지원 등) 참여시 우대 등을 통해 중견·중소기업 **"백만누리 (1개 기업이 1백만원 이상 구매)" 운동 확산**

○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자에게 **과태료를 부과**하고, **신고 포상제도 활성화** ('15.3, 온누리상품권 운영요령 개정)

4. 현장 체감형 중소기업 행정 구현

1 정책 효율성 및 고객 접근성 제고

◇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, **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분석**을 실시하고, **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**으로 개편

1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(매트릭스 분석 활용)

○ **"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*"**에 관계부처 공공 D/B**를 보완

* 115만개 기업정보 + 557개 정책정보

** 국세청 (기업 매출), 고용부 (종업원수), 관세청 (수출), 특허청 (지식재산권) 등

○ **"매트릭스 분석"**을 통해, 유사·중복 사업 검증 등 **차원높은 정보 도출**



2 「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제도」 시행

○ **(지원사업)** 수혜기업 만족도, 지원효과, 운영효율성 등 성과분석 및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고, **다음 연도 예산편성** 등에 반영

* ('15) 금융·인력 → ('16) 기술·소상공인·판로 → ('17) 창업·수출·경영

○ **(지원기관)** 일정금액 이상 중소기업 **지원기관*의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****하고, **공공기관 경영평가** 등에 반영 추진

*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('14년 기준 63개 기관)

** 지원기관별 수혜기업의 중·단기 경영개선율 (매출·고용·수출 증가율 등) 평가

3 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, '15.상)

○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('13.12)과 **일관성을 유지**하기 위해, 기존 상시근로자 대신 **3년 평균 매출액 기준** 적용

소기업 범위기준 개편방향 (예시)

업 종	현 행 (상시근로자)	개 편 (매출액)
▪ 전기·가스·수도	10명 미만	100억원
▪ 광업, 제조업, 운수업, 건설업	50명 미만	70억원
▪ 금융·보험업, 농·림·어업, 도·소매업	10명 미만	
▪ 하수·폐기물처리·환경, 부동산·임대업	10명 미만	40억원
▪ 출판·영상·정보·통신, 시설관리·사업지원	50명 미만	20억원
▪ 보건·사회복지사업	50명 미만	10억원

4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고객 접근성 강화

○ 수요자가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**'정책등록번호'**를 도입하고, **'정책 차림표*(디렉토리)'** 구축·제공 ('15.3)

* 지원목적, 지원대상, 집행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분류하여 정책담당자 및 중소기업이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

- 지원사업 공고를 **월단위로 사전 안내**하는 **'정책캘린더' 운용** ('15.3)

○ **'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'과 기업마당을 연계**하여 **'기업중심 맞춤형 정보' 제공*** ('15.12)

* 기업별 지원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정보제공, 온라인 신청연계 등

○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각 부처의 **정책정보 100개를 엄선**한 **「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** (포켓북)」 개정판 배포 ('15. 15만부)

○ 중기청 **☎1357 콜센터**를 8개 유관 부처*의 콜센터와 연계 ('15.9)하고, **정책정보 문자서비스** 대상 고객 확대 ('14. 4 → '15. 5만명)

* 산업부, 미래부, 고용부, 금융위,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특허청

2 중소기업 현장규제 지속 개선

◇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유발하는 **불합리한 규제를 발굴·개선**

1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사전에 차단

○ **'규제영향평가'를 강화**하여, 각 부처의 규제 신설·강화 시 **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가능성**을 심층 검토

*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을 위한「행정규제기본법」국회 제출('14.8)

○ **자치법규**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를 위해 **지방중기청장의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확대** ('14. 15 → '15. 17개)

2 규제비용총량제 등 자체규제개혁 추진

○ **규제의 신설·강화**로 **추가 규제비용*** 또는 **규제점수**** 발생 시, 상응하는 규제를 **폐지·완화**하여 **규제총량을 일정수준**으로 유지

* 비용총량제 : 규제 비용분석이 가능, 규제 신설·강화시 규제비용을 총량 관리
점 수 제 : 규제 비용분석이 불가능, 규제 신설·강화시 규제점수를 총량 관리

○ **등록규제 감축, 일몰설정** 등 기업 활동 관련규제(113건)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**주기적**(월별)**으로 점검**

* 등록규제 감축(%, 누적) : ('14) 12 → ('15) 15 → ('17까지) 20
일몰설정 규제(%, 누적) : ('14) 38 → ('15) 42 → ('17까지) 50

3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

○ 중소·중견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마당(주 2~3회)을 정례화 하고, 지방청·옴부즈만 등을 통한 **1:1 맞춤형 애로 해결**

* 개별기업 애로는 지방청(비즈니스지원단), 규제애로는 옴부즈만을 통해 해결

○ 이야기 형식의 홍보자료 제작 등 **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홍보**,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와 **협업홍보를 통한 규제개선 성과 확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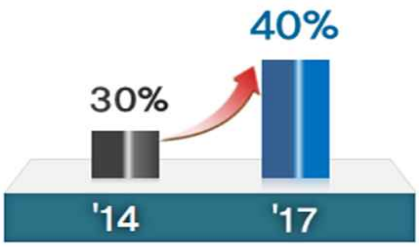
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1 주요 기대효과

◇ 도전적 창업과 중소·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활발한 **"역동적 기업 생태계"**를 구현하여, **창업대박 및 글로벌 성공신화**를 **조기 창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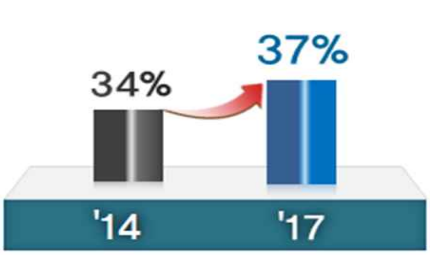
□ **(벤처·창업)** 미국·이스라엘 등 **선진국 수준의 선순환 생태계 정착**

○ '17년까지 **창업 5년차 생존율을 10%p 제고** (30 → 40%)하고, **창업환경 순위** (세계은행)도 **글로벌 TOP 10에 진입**

창업 5년차 생존율	창업환경 순위 (World Bank)
	

□ **(성장사다리)** 히든챔피언의 나라 **독일**과 같이, **중소·중견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**으로 전환

○ '17년까지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**을 **37%**까지 끌어 올리고, **중견기업**도 **3,500개 수준**으로 육성

중소·중견 수출 비중	중견기업 수
	

2 향후 추진계획

□ **(법령 정비)** 기술창업 촉진,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, 「벤처기업법」, 「여성기업법」 등 **9개 법령 개정**을 조속히 추진

□ **(협업체계 및 이행방안) 원활한 정책추진**을 위해 **타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업체계***를 구축하고, **과제별 세부 이행방안****** 마련

* 「홈쇼핑 정상화 T/F」, 「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협의체」 등

** 재도전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 ('15.2),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계획 ('15.2), 중소 →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 ('15.3) 등

□ **(정책 모니터링)** 정책성과 분석,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, **현장**에서의 **작동 여부와 실효성**을 주기적으로 **점검하고 환류**

○ **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**을 활용하여, '10년 이후의 **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원기관의 성과를 분석**하고 **개선방안** 마련

○ 포켓북 (15만부), 통합콜센터, 온라인 정책정보전달시스템 (기업마당)을 통해, **중소기업 지원정책**을 **수요자에게 신속히 전달**

「2015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」 담당자 및 연락처

담당 부서	담당자	연락처
정책총괄과	과 장 이준희 서기관 이순배 사무관 김민규	☎ 042-481-4537, 042-481-4540, 042-481-4543